

다가오는 한·중 FTA, 농업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최 세 균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주로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9,000만원인 반면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차가 무려 45배에 이른다. 월급쟁이로 불리는 급여소득자들의 상위 20% 소득은 전체의 41%이고 하위 20%가 차지하는 몫은 8%에 불과하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농가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11배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은

1995년 95%에서 2009년 66%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농촌내에서도 지역간, 작목간 소득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장개방이다. 우리나라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친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도 자본시장의 개방과 관련이 있다. 시장개방은 경쟁력이 생사를 가르는 '정글의 법칙' 또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생산한다.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

익을 보고, 어느 한 국가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이익이 편중된다. 경쟁력이 약한 국가나 산업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한·중 FTA 농업부문 피해가장 커

시장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협상 타결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이다. 우리나라의 4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가운데 EU 및 미국과의 FTA는 이미 타결되었다. 일본과의 FTA는 우리 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부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협상은 한-중 FTA가 될 것이다.

한-중 FT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는 다른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 운송비와 신선도 유지에 큰 문제가 없고, 농산물의 종류나 수확시기도 차이가 없다. 이는 칠레, 미국, EU 등과의 FTA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이나 EU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결국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중국과의 FTA가 우리 농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 EU 등과의 FTA는 물론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의 대부분이 축산업에 집중되었음에 반해 중국과의 FTA는 채소(특히 고추, 마늘, 양파), 과일, 잡곡 등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의 2/3는 축산업에서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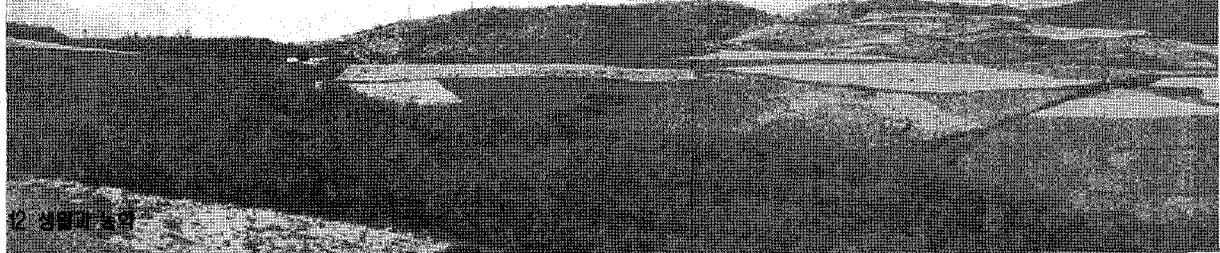
중국과의 FTA를 충분한 국내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중국과의 FTA가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의 개시는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

고 다음으로 과수산업의 피해가 크다. 두 부문을 합하면 전체 피해의 90% 이상이 된다. 유럽 연합과의 FTA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94%는 축산업에서 발생한다. 결국 우리나라 농업이 FTA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분야가 채소와 잡곡 부문인데 중국과의 FTA는 바로 이 두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FTA로 인한 피해가 우리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인가? 중국이 체결한 FTA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만, 동남아시아 10개국 등과 맺은 FTA에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또는 주변국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중국은 뉴질랜드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낙농품의 일부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하였다. 중국도 협상 대상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보호하고 있

는 것이다. 셋째, 칠레와의 FTA에서 중국과 칠레 양국은 모두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먼 나라와의 협상은 경제적 실익에 기초하고 가까운 나라와의 협상은 정치, 외교적 측면이 강조된 FTA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중국과 맺은 FTA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우리가 민감 품목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고 중국 시장은 더 많이 개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전협의를 공동연구 과정을 보면 중국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맺은 방식으로 FTA가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예외 요구에 인색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나 일본과의 FTA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중 FTA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시장개방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국간에 민감 품목을 어느 정도 예외로 한다고 해도 농산물의 전방위적 개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개방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농업 유지·발전 방법 찾아야

협상 대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외적으로 협상 대상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국내적으로 협상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한-미 FTA 이후 대외 협상 전략에 의해 농업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개방되었고, 이후 이어진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제 국내대책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협상에 의해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도 우리 농업을 적정 수준이상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미 FTA 대책으로 21조 4천억원의 투융자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피해가 큰 축산업과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95%가 집행된다. 단기적 대책으로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평균가격의 85%(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 기준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차이의 90%를 보상하는 것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순이익의 3년분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폐업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5년이고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기간은 10년에 불과하다. FTA 이행 기간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15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의 연장도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대책도 기준가격과 보상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당한 갈등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과의 FTA를 충분한 국내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중국과의 FTA가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의 개시는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 ㉞